

# 증오에서 희망으로: COVID-19 대유행병 기간 중 증오 조사 보고서

## 개요서

2023 년 3 월

영어 보고서 전문: [bchumanrights.ca/Inquiry-Into-Hate](https://bchumanrights.ca/Inquiry-Into-Hate)

COVID-19 대유행병 기간 중 우리는 집단적 순진함을 상실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역 사회나 직장, 매일 일과, 정치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제 우리는 미생물 같이 작은 것이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건강 위기 못지 않게 증오와 폭력의 증가 등 사회적 위기를 보게 될 것을 안다. 우리는 미래의 위기 상태에서 증가하는 증오에 놀랄 수 없다. 우리는 대유행병 기간에 경험한 일들을 반드시 직시하고 지금 조치를 취하여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권고 사항에 조치 방향이 나와 있다.

증오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번 대유행병 기간은 우리가 공포와 불신, 분열, 증오로 가득했던 집단적 경험을 했던 시기이다. 대유행병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도록 마련된 제도들을 시험했다. 이 기간은 인종이나 종교에 기반한 증오뿐 아니라 노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보건 공보관, 정치인, 그 외 많은 자를 향한 증오로도 얼룩진 시기이다. 온라인 증오의 표적이 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시되는 것을 본 시기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집단적 돌봄을 본 시기이기도 하다. 인종 차별 및 인종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크게 고취됐다. 지역 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오에 공개적으로 맞섰다.

이런 맥락에서 BC 주 인권 위원(Human Rights Commissioner)은 이번 공개 조사, 즉 COVID-19 대유행병 기간 중 발생한 증오 조사에 착수하여 이 기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보고된 증오

관련 사건의 증가 및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을 개발했다. 인권 위원회는 이 조사를 알리려고 참고 용어와 "증오 사건(hate incident)"의 정의를 개발했다. 인권 위원회와 실무진은 간편한 조사 절차를 개발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정신적 외상을 인지했다.

인권 위원회는 다음 방법으로 정보와 증거를 수집했다.

- 46 회의 가상 구두 청문회에서 52 개 단체를 포함한 100 명의 의견 청취
- 20 건의 서면 의견 개진
-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 표본에 대한 여론 조사
- 공개 설문 조사로 2,500 여 명의 의견 청취
- 46 개 공공 기관에 정보 요청
- BC 주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 경찰서 및 BC RCMP 에 두 세트의 정보 요청
- 7 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명령 및 정보 요청
- 조사 관련 주제들에 대한 5 건의 외부 연구 보고서
- 관할권 협업 연구
- 대면 원로 모임

**이 증거를 통해 인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했다.**

- **증오 사건이 대유행병 기간 중 급격히 증가했다.** 인권 위원회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원주민 여부 등을 이유로, 특히 교차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BC 주 곳곳에서 경험한 증오를 심리했다. 반아시아인 증오가 특히 급등했는데, 증오와 폭력이 성별을 기반으로 자행됐다.

대유행병 기간 중 일상생활의 일부인 공공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증오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장소에는 거리, 공원, 대중교통, 음식점, 상점, 학교, 의료 환경, 자택 등이 포함된다. 증오 사건의 범위는 증오성 언급과 비방, 낙서, 재산 피해, 신체적 괴롭힘과 공격, 폭행 위협, 침 뱉기나 쓰레기 투척에서부터 난폭한 폭행에까지 이르렀다.

- **증오는 소외된 공동체가 불균형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교차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증오 경험이 불균형적이다. 증오는 신체와 정서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주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낳으며, 개인의 소속감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영향도 미친다. 증오의 영향은 누적된다.



- **성별에 따른 폭력이 대유행병 기간 중 급격히 증가했지만**,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폐쇄되거나 역량이 감소한 상태로 운영되어 피해자-생존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이런 증가는 이전의 사회적 위기가 비슷한 증가로 이어졌음을 고려하면 예상하고 완화했어야 했다. 인권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성별에 따른 폭력, 여성 혐오, 집단 살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성별에 따른 증오가 성별에 따른 폭력에 자주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폭력이 법에 의해서나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 안에서 증오로 간주되는 경우는 드물다.
- **온라인 증오가 대유행병 기간 중 급격히 증가했다.** 인권 위원은 여러 요인이 대유행병 기간 중 온라인 혐오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온라인 이용 시간 증가, 잘못된 정보와 고의성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의 확산 만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설계, 기업 차원의 증오 발언 금지 정책의 미흡한 시행 등이 그런 요인이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다수의 알고리즘도 사용자를 혐오 콘텐츠로 유도하여 증오를 유발한다. 대다수 소셜 미디어 기업의 정책과 관행을 보면 자사 플랫폼에서 증가하는 증오에 대처하려는 열의와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많은 기업이 증오가 자사 플랫폼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또는 그들이 증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문제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증폭될 수 있다.
- **증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BC 주에서 증오의 역사는 오래됐으며, 권력과 통제 및 오랜 차별과 억압의 패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유행병 기간의 특정 상태(소외, 공포와 불안, 온라인 이용 시간 증가, 경제적 스트레스 등)와 대유행병 전에 재등장한 백인 민족주의의 증가를 (특히 미국과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즉,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역에서 증오 사건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오는 종종 개인의 행동으로 표출되지만, 기존의 억압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차별과 불평등이 다 증오 발언과 폭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대유행병 기간의 증오와 관련하여, 질병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혐오 및 그 외 차별 방식 간에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심리 연구 결과가 있다.<sup>1</sup> 이전의 대유행병 기간에도 증오 사건의 비슷한 증가를 보였다. COVID-19 대유행병 당시 증오 증가의 원인이 됐던 기타 관련 요인으로는 국내외에서 자행된 비난 추세, 공중 보건

<sup>1</sup> Mark Schaller, Damian R. Murray, and Marliese K. Hofer, "The Behavioural Immune System and Pandemic Psychology: The Evolved Psychology of Disease-Avoid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Attitudes, Behaviour, and Public Health during Epidemic Outbreak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November 2, 2021, 1-37.



대책에 반하는 선동,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알코올과 정신 건강 문제, 공동체와 소속감 부재, 증오의 일반화와 오류 정보, 고의성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의 확산, 극우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 극단주의 등이 있다.

- **주 전역의 다양한 부문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증오 사건의 데이터가 결여돼 조치가 지연된다.** 인권 위원은 조사를 알리려 증오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인권 위원은 대부분 공공 기관이 증오 사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권 위원은 또한 데이터의 질에 문제가 있거나 경찰, 기소, 법원 데이터에 한계가 있음도 알게 됐다(증오가 양형 시 가중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추적 기록도 없다는 사실 포함). 더구나 소셜 미디어 기업은 대유행병 기간 중 BC 주나 캐나다 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증오 관련 데이터를 인권 위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 **증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대체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 문제에 법(형법, 민법, 행정법 포함)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신고상 문제(경찰 대응 시 안전 결여, 지역 사회 신고 간 업무 협조 결여, 신고 처리에 대한 책임성 결여), 경찰과 검사가 권고하거나 추구하는 기소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법(지역 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증오 신고 건수에 비하여 극소수만 기소됨), 민사 사법 제도 이용 불가, 민간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결여, 인권 재판소 사건의 심각한 적체 등이다.
- **증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대체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공공 기관의 관련 정책 부족, 데이터 부재, 지역 사회에 잘 자리 잡아 그 지역 내 증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부족, 인권 기반 접근법을 응급 상황 관리에 적용하지 못함 등이다.
- **증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은 효과적일 수 있다.** 적절한 자금 지원과 중앙 집중식 조정으로 가능하다. 특히, 지역 사회 단체는 증오 경험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증오 범행자에 대한 퇴출로 제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 보고서에 제시된 산더미 같은 증거를 검토한 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력 있게 연민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비폭력적인 대응 방안을 고안하여 증오에 맞서야 한다. 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방대한 증거에서 드러난 다음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 증오에 대한 이해와 증오의 피해 인정
- 안전과 소속감
- 야기된 피해의 책임과 시정

위 주제들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위기에 대응할 때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무지는 교육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불처벌은 책임의 소재를 더 강력히 묻는 메커니즘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고립은 소속감과 연결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인권 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입법 권한 밖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인권 위원회가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시하는 권고가 이 온라인 기업들에 캐나다 정부의 규정을 알리는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 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아래에 나와 있다. 권고 사항 전문은 "[분석 및 변화를 위한 권고](#)" 참조.

**아래에 권고된 정책 변화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인권 위원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가 위기의 시기와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여 우리 지역 사회의 증오를 해소하는 열의를 보여줄 것을 권고한다.**

- 1 BC 공공 서비스(BC Public Service) 수장은 차관보급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 증오 예방과 대응을 조율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이 자리에는 주 정부 및 관련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이 보고서에 있는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자리의 권한은 증오의 모든 영역, 즉 성별(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 포함), 인종, 종교, 원주민 여부, 성적 지향, 장애, 사회적 조건 등에 따른 모든 증오에 뻗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주 총리와 내각은 이 보고서와 인권 위원회의 권고로 알려진 증오에 대처하는 정부 전체의 전략과 실행 계획을 분명한 일정, 결과물, 투명한 보고 등을 내용으로 수립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이 전략과 실행 계획에는 반드시 자금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하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지역 사회 자문단을 구성하여 증오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 개발 지원
  - b. 경찰 데이터베이스, 소셜 미디어 보고서, 중앙 집중식 지역 사회 신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증오 사건에 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발표 약속



- c.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핵심 성과 지표로 측정하여 계획하에 이루어진 진전 상황 관련 연간 공개 보고서 발간
- d. 주 의회가 심의할 BC *인권법*(제 47.12 조) 개정안을 제출하여 인권 위원에게 이 전략의 시행에 대한 독립적 감독권을 제공하게 하는 입법 권한 부여

## 증오에 대한 이해와 증오의 피해 인정에 관한 권고 사항

- 3 우리는 모두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주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증오를 이해하고 그에 맞설 의무가 있다. 우리는 증오 앞에서 무력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증오 대상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이 포함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우리 지역 사회와 공공 기관에서 소속감과 포용심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BCOHRC 는 증오에 대처하려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 4 교육 보육부 장관(Minister of Education and Child Care)은 K~12 제도 전체에 걸쳐 반증오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증오와 극단주의를 식별하고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자세를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 보육부는
  - a. 반증오 교육을 최소한 하나의 “큰 개념”으로 교육 과정에 직접 포함하여 특정 교과 수행 역량, 내용, 보조 자료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 b. 증오, 오류 정보, 고의성 허위 정보를 교육 보육부의 디지털 문해력 체계에 추가하여야 한다.
  - c. 원주민, 흑인, 그 외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여성, 성 소수자(LGBTQ2SAI+), 장애인, 그 외 소외된 공동체의 역사와 기여를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5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은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의 지원을 받아 민간 또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주 전역 증오 사건 중앙 집중식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절히 자금을 지원하고, 홍보하여 다음 기능을 하게 하여야 한다.
  - a.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명확성을 위하여 이 신고 시스템에는 강력하고 접근하기 쉬운 권익 대변자 및 상담원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증오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즉시 받게 할 수 있다.



- b. 피해자-생존자를 지원하여 인권 불만 제기, 경찰 신고, 회복적 사법 절차 등 법체계를 알아보게 한다.
- c. 신뢰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세를 분석하고 이런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를 공공 안전 치안부에 권한다.
- d.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 및 학교와 기타 청소년 대상 기관에서 이들이 겪은 중요 경험을 고려한다.

이 신고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신고 플랫폼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고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반드시 도시, 지방, 벽오지 전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최일선 서비스 단체는 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정보를 반드시 게시하고 모든 직원과 서비스 대상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생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6 BC 주의 모든 경찰 서비스는 지방 자치 단체 경찰서와 RCMP(BC 주에서 계약을 맺어 운용하므로) 공히 내부 자금을 전용하여 신입 경찰관 추가 교육과 의무 교육 및 중요 범죄 대응, 수사, 혐의 권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 능력 개발 용도로 추가하여야 한다. 교육은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이 제정하는 표준화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중요 사건 인식 방법, 성별에 따른 폭력을 중요 관련 기소 대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관한 교육 등이 분야의 비전문 경찰관에 대한 교육 증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안전과 소속감 구축을 위한 권고 사항

- 7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은 법무 장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사회가 증오를 다루는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돕고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증오 예방은 물론 증오가 발생하면 대처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증오 대처에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강력한 정신 건강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 접근법은 원주민과 원주민의 법 전통에 의하여 알려져야 한다. 또한, 회복 절차에는 다신앙 및 다문화 공동체와 지도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다. 서비스는 반드시 도시, 지방, 벽오지 전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회복적 접근법에 대한 잠재적 위험(보고서에 상술됨)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 및 효능에 대한 공개 보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적합하도록 맞춰져야 한다.



- a. 중요 범행자와 중요 범행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 이념과 중요 집단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 전과자는 중요 범행자나 잠재적 범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야 하며, 이 같은 프로그램은 **형법**에 따라 중요 관련 형사 범죄로 조사, 기소 및/또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범행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 b. 중요 사건의 피해자-생존자를 지원한다.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심은 반드시 중요 사건 피해자-생존자의 견해, 필요, 동의이어야 하며, 지역 사회 연결과 지역 사회 기반 지원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은 비상 관리 기후 대비부 장관(Minister of Emergency Management and Climate Readiness)과 협력하여 인권 기반 접근법을 기존의 비상사태 대응 절차에 통합하여야 한다. 특히

- a. 주요 위기에 대한 비상 계획에는 중요 발언 및 중요로 촉발된 폭력(성별에 따른 폭력 포함)의 증가에 대처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일선 종사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b. 위기 상황 소통 전략을 개발하여 여러 언어로 이용하기 쉽고 정확하며 증거 중심의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은 반드시 포용과 응집을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를 신속히 배격하여야 한다.
- c. 성별에 따른 폭력 등 증오에 맞서 일하고 자금 지원을 잘 받는 지역 사회 단체들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지한다. 피해자-생존자 및 가해자 지원에 관련된 지역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대유행병 기간 중 정부가 행한 비상 대응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의 비상 대응 절차에 통합하여야 한다.
- d. 반폭력 비상 계획에는 안전한 은신처와 지원(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의 쉼터와 임시 거처, 피해자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연락 수단)을 구하는 여성, 청소년,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가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 건강 및 중독 관련 지원도 오남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e. 장벽이 낮은 정신 건강 지원이 잠재적 불안, 공포, 불확실성, 응급 상황과 관련한 격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폭 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 9 구글, 메타, 레딧, 럼블, 텔레그램, 틱톡,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 a. 혐오 콘텐츠에 대처하는 엄격한 서비스 조건을 갖추고 시행하여야 한다.
- b. 분열, 차별, 오해의 소지가 덜한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알고리즘을 개혁하여 사용자가 잠재적으로 혐오스러운 정보에서 멀어지게 한다.
- c. 혐오 콘텐츠 옆에 광고가 실리는 것을 즉시 중단한다.
- d.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플랫폼 설계로 조장되는 지속적인 증오 확대 위험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위험에 대하여 위험 경감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 e. BC 주 온라인 증오 콘텐츠의 발생 빈도와 성격 및 시의성, 취해진 조치, 이의 제기과 결과 반복 등 플랫폼 대응에 관한 적시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 보고를 약속한다. 투명성 요건도 포함되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독립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플랫폼상 증오 콘텐츠의 만연과 플랫폼의 대응을 평가하고 이 같은 접근권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하여야 한다.

## 책임과 시정을 위한 권고 사항

**10** 법무 장관은 증오 범죄 기소 시 다음 방법으로 공익을 강력히 강조하도록 검사의 업무 방침 지침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여야 한다.

- a. 증오 관련 사건의 폭넓은 기소 권장. 회복적 사법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 b. 성별에 따른 폭력을 언제 증오 범죄로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 교부(성별에 따른 폭력이 양형에서 증오 관련 가중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포함).
- c. 혐의 승인, 기소 결과, 양형 등 증오 사건의 데이터 및 증오가 양형 시 가중 요인이 된 사건의 데이터 수집 및 발표. 이 데이터에는 세분화된 인구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 개혁이 증오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의 효능을 개선하고 기소로 불공평이 심화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11**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은 경찰에 신고된 증오 사건 대응에 관한 치안 기준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되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성별에 따른 폭력을 증오 범죄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강조 및 성별에 따른 폭력을 양형 시 증오 관련 가중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 지침.
- b. 수사와 혐의 권고를 지원하는 증오 범죄 지표.
- c. 모든 경찰서가 최소한 한 명의 기존 직위자를 지정 증오 범죄 전문가로 임명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요건. 그는 전문 검사와 BC 증오 범죄 전담반에 자문하는 일을 담당한다.
- d. 피해자-생존자에게 주 전역 신고 시스템을 소개하여 지원을 받게 하라는 경찰에 대한 지시.
- e. 통일된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확립하게 하는 지시. 증오 사건/범죄의 일관된 정의 및 명백한 경우 복수의 증오 동기 및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세분화된 인구학적 데이터를 기록하는 요건.
- f. 사람들에게 신고를 권장하고 증오 사건을 더 광범위하게 수사하라는 경찰에 대한 지시.

인권 위원회는 RCMP 가 증오에 대한 그들의 BC 주 내 치안 기준과 BC 주 정부 치안 기준이 BC 주 경찰 서비스 협정 제 6.5 조에 따라 조화를 이루게 하리라고 예상한다.

**12** 법무 장관은 다음 방법으로 BC 인권 재판소가 증오에 더 즉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재판소가 제소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적절한 자금 지원.
- b. 주 의회가 심의할 BC *인권법* 제 7 조 수정안을 제출하여 이 조항이 출판물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
- c. 주 의회가 심의할 제 7 조 수정안을 제출하여, 금지된 차별 근거가 수록된 인권법의 다른 실질적인 조항들과 더불어 이 조항에 사회적 조건을 금지된 차별 근거로 추가하여 사회적 조건이 혐오성 출판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함.

